

충남리포트 제202호

# ChungNam Report

2016. 1. 7.

## CONTENTS

### 〈요약〉

1.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
2. 공공부문의 범위와 현황
3.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혁과제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itspolitics@naver.com](mailto:itspolitics@naver.com)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고 충남 도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음.

### 요 약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하였음. 그런데 교육, 금융, 노동 개혁도 따지고 보면 공공부문의 문제임.
- 규제개혁과 조세재정, 복지개혁도 공공부문 문제임. 또한 정치개혁, 사법개혁, 지방자치분권 개혁, 국방개혁, R&D개혁, 보건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임. 그러므로 우리시대 최대의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임.
- 본 연구는 기존의 공공부문 연구사례와 관련 담론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현재 생산된 통계를 통해 공공부문의 실태와 향후 연구·개혁 과제를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에 초점을 맞춘 기존 개혁담론을 탈피하여, 공공 부문이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산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기능을 분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제시하였음.
-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의 경우, 선도적으로 선진적 감사제도, 공공부문 직무별 근로조건 표준 설정, 직업 고등학교 개혁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하였음.
  - 또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요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것과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음.
  - “공무원 연금 개혁”은 2015년 5월 여·야 합의안을 통과 시켰으나, 그 외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있음. 9.13 노사정(정부-경총-한국노총) 합의는 노동개혁의 일환임.
  - 이에 공공부문 개혁 논의의 현주소와 과제 및 방향을 살펴 충남도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공공부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적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이는 1970~1990년대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재정적자로 몸살을 앓았던 주요 선진국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음.
  - 하지만 한국의 문제의식은 선진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즉 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차별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뒤에는 정부의 실패한 규제 감독과 가격(요금, 의료수가 규제 등) 및 예산 할당 정책이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신용카드 사태 뒤에도 역시 실패한 규제 감독이 있음. 낙후한 금융산업과 고비용·저효율의 전형인 공교육, 방위산업 비리와 병영 폭력 사태 뒤에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공부문의 문제(규제, 예산, 리더십, 시스템)가 있음.
  - ‘신의 직장’이라는 비아냥과 고시·공무원시험 열풍으로 불거져 나오는 청년 인재의 불건전한 흐름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

- 한국은 유교의 전통, 식민통치, 분단과 전쟁, 국가주도의 경제개발로 집약되는 역사로 인해, 국가와 공공부문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이 매우 중요함.
- 공공부문 혹은 공공조직은 국가권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 운영되는 조직인데, 크게는 국가사무처리 조직(행정, 입법, 사법 등), 지방사무처리 조직(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특수법인(한국은행, 금감원) 등으로 구성됨.
  - 기능이나 재원으로 보면, 농협이나 정당까지도 공공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세금과 특별 규제에 의해, 또 정치인과 직업관료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의해 운영됨.
  - 한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규제, 처벌, 예산, 권한 등을 감안하지 않고 GDP대비 재정 비중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편적임
- 통계청이 발표한 ‘행정자료를 이용한 임금근로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개수는 260만개임.
  - 이 외에도 사회보장성기금 종사자, 보건의료산업, 방위산업, 은행산업과 사실상 정부가 임면권을 행사하는 포스코, KT, 농협과 정부 소유 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부실기업 역시 사실상 어느 정도 공공부문에 속함.
  -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압박을 받는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어서 자원(인재)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음.
-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과제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 개혁이었고,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제는 교육, 금융, 노동, 공공 개혁임. 교육과 금융 개혁 역시 공공 개혁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음.

- 노동개혁도 어느 정도 공공부문의 문제임. 한국 노동조합의 양적, 질적 주류는 공공부문 노조이며, 개혁이 필요한 고용임금 체계나 관행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있기 때문임.
- 규제개혁과 조세재정·복지개혁은 원래 공공부문 개혁의 중핵임. 뿐만 아니라 정치, 사법, 지방자치분권, 국방, R&D, 보건의료 등도 공공부문 개혁의 한 분야임.
- 이렇게 본다면 우리시대 최고·최대의 개혁은 국가(정치인과 관료)권력과 관련된 공공부문 개혁임.

●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된 기존의 담론은 기본적으로 총량적 접근에 뿌리를 두고 있음. 정부예산규모(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공공부문 부채, 국민 1,000명당 공무원수 등이 주요한 지표임.

- 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함. 이것은 사회복지의 역사가 짧아서 수급자가 아직 많지 않은 한국의 재정을 탄탄하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초래함.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이 새롭게 작성한 ‘공공부문계정 신규작성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포괄범위인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와 기금은 총 5,255개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2015년 현재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6개, 기타공공기관 200개 등 총 316개임.
- 공공부문을 인건비(피용자보수) 관점에서 보면 2013년 기준 일반정부 95.9조원, 비금융공기업 16.7조원, 금융공기업 2.2조원으로 피용자보수총액의 18.3%를 차지함. 이를 임금근로자 수의 18.3%로 본다면 총 330만 명에 해당함.

● 한국 고용시장의 문제는 공공부문의 과대에만 있는 것이 아님. 공공의 핵심인 공무원의 고용패러다임과 처우표준이 한국경제 수준에서 과도하다는데 있음

- 9급, 7급, 5급으로 구분된 공무원 시험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얻고, 직급과 연공(호봉)에 따라 지위와 임금이 상승하고, 정년보장이 확실한 공무원의 고용임금 표준(패러다임)은 민간부문이 고속성장을 하고, 정권이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남발하던 개발연대-권위주의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수명이 다했음.

- 수명이 다한 직무나 부적합 인력에 대한 정리가 어려움. 직급-호봉제와 사실상의 자동승진제로 인해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가 큼. 이는 개발연대에는 우수 인력을 잡아두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현재는 민간의 우수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함.
- 공공부문의 엄격한 임용제도와 높고 경직된 고용임금으로 인해 많은 공공서비스 인력들(어린이집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보조교사 등)이 선진국과 달리 정식 공공부문(정규직)으로 편제되지 못함.

- 공무원 기본보수규정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을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 민간임금접근율’이라는 관리지표를 만들었는데, 민간임금이 100인 경우 공무원보수는 2004년 95.9%까지 근접했다가 2013년 현재 84.5% 수준임.

〈표 1〉 공무원 보수 추이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민간임금접근율	93.1	91.8	89.7	89	89.2	84.4	85.2	83.7	84.5	-
공무원처우개선률	1.3	2	2.5	2.5	0	0	5.1	3.5	2.8	1.7

출처 : 안전행정부 『민.관보수수준실태조사결과』

- 2014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447만 원으로 연 5,394만 원임. 이는 2014년 1인당 국민소득 2,968만 원의 1.8배에 해당됨.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 114만6천 원을 합치면 평균 5,500만 원을 초과.
- 공무원의 임금수준은 국제비교통계가 부족함. 직무성격도 천차만별이어서 국제비교가 곤란함. 이에 국제비교가 가능한 각국의 교사 임금을 교차 비교함
  - 교사의 처우수준은 공공부문에 대한 비교 기준점으로 활용 가능함.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들의 임금은 교사임금의 2배 수준임.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2011년 현재 1인당 PPP(구매력지수)로 교사임금을 나타내면 중학교 교사초임 0.95배, 15년차 1.67배, 최고 호봉 2.65배로 0.8~1.2배인 선진국 평균에 비해 높음.
- 국가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달성한 한국에서 공공부문의 위상은 매우 높음.

- 기업 서열순위<sup>1)</sup> 1위 삼성, 2위 한전, 3위 한국토지주택공사, 11위 한국도로공사, 12위 한국가스공사 뿐만 아니라 8위 포스코, 13위 농협, 16위인 KT 등은 공공기관도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가 변칙적으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음. 4대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함.

● 지방공기업은 2015.1.1. 기준 총 400개(서울 31개, 경기 104개, 충남 30개 등)임. 2014년 기준 인원은 총 76,489명이며, 2010년 60,523명에서 경향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아래 표는 충남 지방공기업 현황을 보여줌

〈표 2〉 충남 지방공기업 현황(총30개)

광역	직영	1	충남지역개발기금	
	공사	2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기초	직영	22	상수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홍성, 예산
			하수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공영개발	천안, 보령, 아산, 계룡
	공사	1	당진해양관광공사	
	공단	4	보령시설관리공단, 천안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자료: <http://www.cleaneye.go.kr/programs>

1) 2013년 4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정보 포털(<http://groupopni.ftc.go.kr/index.jsp>)

##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개혁과제 ◀

# 03

- 우리나라 행정의 중추적 기능이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함.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은 기본적으로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기준(정책)을 수립·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파장이 큰 정책 실험을 하기가 어려움
  - 그러므로 지방정부가 앞장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행정적 실험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지방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다음 세 가지 공공부문 개혁과제는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충청남도가 먼저 시행하기를 제안함

### 1) 선진적 감사제도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교해 행정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투명과 참여’임.
  - 부패와 행정 비효율은 대부분 정보 접근을 막아두는 데서 기인함. 미국의 경우 행정정보의 개방을 통해서 빅데이터 산업을 창출하기도 함. 감사제도를 혁신한다면 행정효율과 부패방지의 두 가지 목표를 성취 가능함.
  - 충남도는 이미 투명한 행정을 목표로 한 ‘제로100 프로젝트’라는 행정 혁신을 훌륭히 수행한 경험이 있음.
- 지방정부조직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의 감사는 2년 주기 순환보직 공무원에 의존하기에 자칫 의례적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음. 또한 한국의 감사는 대부분 수행한 업무가 적법한지만을 따지는 적법성감사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
- 충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도지사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인구 8백만인 뉴욕은 시장만이 아닌 감사관 즉 컨트롤러를 직접선거로 선출.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특별법에 의거해 의회에서 감사위원 3명을 추천함. 일본의 경우 외부감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
- 좁은 지역 사회에 외부전문가가 개입하면 피감기관과의 유착을 사전 방지 가능함. 충남도의 현실에서 능력 있는 외부 전문가 발굴과 피감기관과의 유착을 막는 것이 중요함.

## 2) 공공부문 직무별 근로조건 표준설정

-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직무별 임금 및 근로조건표준”을 만드는 것임.
  - 한국의 경우 직무와 근로조건표준의 상관성이 떨어짐.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라고 해도 소속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 즉 기업의 수익성과 교섭력에 따라 몇 배의 임금격차가 존재함. 그러므로 동일한 직무에 따른 새로운 임금표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직무표준에 관한 연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의 임금평등성 연구는 부족함.
  - 따라서 충남도는 지역 차원에서 직무표준에 근거한 보상의 평등성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기본급,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로 구성된 임금체계에서 복리후생비를 뺀 것이 임금체계임. 직무표준에 따른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분류하고 보상의 격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임금결정요인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공공기관 유사직종의 임금수준(24.8%)으로 가장 높았음. 이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유사직종 임금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임금이 결정된다는 사실임. 이 사실은 충남도가 근로조건표준과 평등한 보상체계를 만드는데 앞장 서야할 필요를 보여줌.

### 3) 지역 맞춤형 교육: 직업고등학교형 혁신학교와 직업 아카데미

● 대학교육의 효능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고, 과잉 고학력화로 인한 폐단(학력 및 기대 수준과 산업 수요 및 능력의 엄청난 부교합)이 너무나 큼.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생애주기 중 언제라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풍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교육청과 산업계와 손잡고 직업고등학교(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형 혁신학교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 고교 졸업 후 70% 이상이 대학을 가고, 또 대학 입시에 사활을 거는 풍조로 인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약30%)이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임.
- 교육청·학교-지방자치단체-지역 사회·산업계의 공조로 고교 졸업 후 취업(선 취업-후 진학 포함)을 원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대안학교 학생을 위한 선진국형 직업고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고교가 변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고졸 취업자의 직업(취업, 적응) 능력 강화와 고졸자에 대한 유무형의 부당한 차별(승진, 기회/자격, 군복무, 결혼시장, 사회적 인식 등) 철폐와 필요할 때 어렵지 않게 대학에 진학하도록 만드는 제도와 문화 개혁이 필요함.

● 한국의 고교 취업(직업)교육과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제도는 개선할 여지도 많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할 여지도 많음.

- 교육청과 학교가 동의 한다면 지자체 및 산업계와 함께 미국의 협약학교(charter school) 같은 학교로 발전시킬 수도 있음. 최신 교육 이론, 프로그램, 새로운 국민(주민)교양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도 있음.
-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 산업인력관리공단 등과 협력하여 완전히 자율적인 비제도권 직업 학교로 발전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전수자나 후계자가 적거나 없어서 사장되는 기술, 기능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음.

김 대 호 소장

사회디자인연구소

02-785-4819 itspolitics@naver.com

※ 본 리포트는 2015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공공부문 개혁 논의의 현주소와 충청남도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한 것임.

## ◆ 참고 자료 ◆

권기현, 임광엽, 방유성, 2014, 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 - 전략과 해법은 무엇인가? 한언

김대호, 2011, 2013년 이후, 백산서당

김현석, 박개성, 박진, 2006, 정부개혁고해성사, 박영사

박정수, 윤태범, 허경선, 2010,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충남리포트(2015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 · 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삼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신호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야 · 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 · 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전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종화	2015.06.19
2015-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 · 여형범	2015.06.26
2015-27	충남의 사회적경제, 자산 활용과 시·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	송두범 · 박춘섭	2015.07.03
2015-28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	이충훈	2015.07.10
2015-29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항구	2015.07.17
2015-30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임준홍 · 홍성효	2015.07.23
2015-31	현대자동차와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	김양중	2015.07.31
2015-32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2015.08.12
2015-33	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홍원표 · 강수현	2015.08.20
2015-34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방안	이관률 · 송두범	2015.08.27
2015-35	충남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분석	이준표	2015.09.03
2015-36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이원태 · 김영일	2015.09.10
2015-37	충청남도 온실가스배출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정종관 외	2015.09.17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38	충남도민의 언론매체 이용 실태와 효율적 정책홍보 방안	박경철	2015.09.22
2015-39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지훈	2015.10.08
2015-40	일본 후쿠오카현의 수소프로젝트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5.10.13
2015-4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방안	임성규 · 정명채	2015.10.22
2015-42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맞춤형 농정혁신모델	김기현	2015.10.27
2015-43	‘도는 도답게’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권선희	2015.10.29
2015-44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최영화	2015.11.05
2015-45	충남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현황과 도민 건강 정책 방안	임준홍 · 이경주	2015.11.12
2015-46	중국 관광객(요우커, 遊客)의 충남 유치 전략 마련	박인성	2015.11.16
2015-47	충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김성욱 · 최정석	2015.11.23
2015-48	적극적인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통해 충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이상준	2015.11.27
2015-49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의 정책 방안	김양중	2015.12.03
2015-50	충남 흥동 유기농업의 특징과 과제	김기흥	2015.12.10
2015-51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측정망, 충남 도내 확대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5.12.17
2015-52	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강마야	2015.12.20
2015-53	금강의 미래, 금강비전으로 말하다	이상진 · 김영일	2015.12.30
2016-01	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 외 2명	2016.01.04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http://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